■北 미사일 해법 '갑론을박'

"외교적 해결을" "선제 폭격해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 각종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 강경파 측에서 선제공격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딕 체니 부통령 등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선제 공격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워싱턴에서 강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또 북한 측의 미사일 발사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적극적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미사일 해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사일 발사시 북도 대가 치를 것"

◇강온대립 = 선제공격 주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지난 94년 1차 북핵위기 때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했던 윌리엄 페리(스탠퍼드 대) 교수와 당시 국방 차관보였던 애시턴 카터(하버드대) 교수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22일 공동 기고문을 통해 "외교적 노력은 이미 실패했으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앉아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기 전에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클린턴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도 "무력방식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아선 안 된다"며 동조했다.

하지만 딕 체니 미 부통령을 비롯한 부시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이날 "외교적 해법이 올바른 것"이라며 북한 선제 공격론을 일제히 반박했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CNN인터뷰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만일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면, 분명히 단 '한 방'을 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왼쪽)통일부 장관이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외교가 올바른 해법이며 미국은 외교적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며 선제공격론을 거부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핵 6자회담은 파국을 맞을 것이며 북한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미국이 직접 양자간 대화 나설 때"

◇보다 적극적인 대화 주문=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전 주한 미국대사)은 23일 "이제 미국이 북한과 직접 양자 간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적극적 협상 노력을 요구했다.

그레그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라는 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양자가 나서서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단절보다는 상호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 정부의 원칙과는 큰 차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정부 "발사능력 자체가 위협, 강력대응"

◇국내 반응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지적한 데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고 해도 미국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당정협의회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능력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발사가 이뤄지면 분명한 태도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26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등과 회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북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설

교육정책 흔들기 전 학교급식부터 살펴라

후진국형 식품안전사고가 또 대형으로 터졌다. 수도권 중·고교에서 무려 1천600여명의 학생들이 오염된 식재료로 만들어진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이다. 사고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에 학교급식을 위탁한 광주·전남 학교 7곳도 어제부터 급식이 중단됐다. 해마다 빠짐없이 발생하는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전국민이 식품위생에 관한한 엄벌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하지만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규모면에서 사상 최대인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교육부를 정점으로 하는 교육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팔고있나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학교급식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이지만 첫째는 안전성, 둘째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영양공급, 셋째는 맞벌이부부 가정등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의 기능도 갖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철저한 상시감독체제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그 기능이 더 예민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사고에서도 감독은 커녕 최초 신고가 접수된지 1주일이 지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사소한 원칙들이 무시됨으로써 발생한 이번사고가 우리 교육행정의 주된 관심이 다른데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사학법 재개정 갈등, 교장공모제 반대,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외국어고 지역제한제 파동 등등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말썽이 안나는 게 없으니 교육관료들이 학교급식 같은 기초 교육행정을 제대로 챙길리 있겠는가. 급식위생을 챙기라는 그 흔한 지시한번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기존정책들을 흔들기 전에 기본에 충실하라.

自治는 政治가 아니라는 퇴임三選군수의 말

이달말로 임기를 마치는 김흥식 장성군수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배 단체장들에게 남긴 충고는 참으로 깊이 새길만 하다. 민선 1기부터 내리 세번 연임하는 동안 전남의 벽지산촌 장성군을 전국적 지방자치 모델로 이끌어 올린 그 이기에 그의 충고는 값지다.

그는 우선 단체장 개인의 처신을 엄히 할것을 당부했다. 이른바 토호세력의 위세에 흔들리지 말고 특정인들과 친분이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군수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든 사람의 관심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면서도 지키기 쉽잖은 처세훈이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빈틈없고 매력적인 계획입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소중하다. 듣기에도 지겨운 푸대접론을 들고나오며 예산을 구걸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그 사업에 돈을 대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라는 충고다. 칭얼대는 자치단체는 정부가 볼때 사업성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충고는 새로 취임할 시장·군수들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게임하듯, 세력다툼하듯 해서는 지역발전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과 단체장·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정치적 신조를 떠나 지역 대소사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만이 지방자치가 꽃핀다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입김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충고다.

이제 다음주면 민선 4기 시대가 개막된다. 성숙한 자치를 향한 주민들의 기대도 함께 커질 것이다. 장성군의 자치성공을 그대로 본뜰 필요는 없으되 광주·전남의 새 단체장들은 김군수의 충고를 한번쯤 되새겼으면 한다.

해외건설·개발사업 시너지 기대
금융부담 우려 시장 분위기 냉담

금호, 대우건설 인수 투자자 반응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투자자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

23일 오전 10시30분 현재 금호산업은 이틀째 약세를 지속하며 전날보다 1.21% 하락한 1만 6천350원에 거래됐다. 대우건설은 소폭의 외국인 매수세에도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서 전날보다 3.01% 하락한 1만 2천900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로 외형이나 점유율, 재계 내 위상 등의 측면에서 한층 도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인수를 계기로 개발사업, 수주시장에서 시너지, 해외건설업 진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늦어도 9월 말까지 최종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순위 재계 7~8위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건설 시공능력 2위 대우건설(6.9%)과 9위 금호산업(1.9%)를 합쳐 점유율 8.8%의 국내 최대 건설 그룹으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금융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금호산업은 적어도 1조원 가량의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과음시 뇌졸중 위험 2배 높다"

英 교수팀, 한국 공무원 조사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영국 브리스톨대학의 에브라힘(Shah Ebrahim) 교수팀은 1990년부터 12년간 검진기록이 남아있는 한국 공무원 78만명을 대상으로 과음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히 강원대 의대 성주헌 교수, 삼성서울병원 송윤미 교수 등 한국인 연구진도 직접적으로 참여,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여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에브라힘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30~64세 연령층의 한국 공무원 78만 7천442명을 2년 간격으로 추적, 모두 3천947건의 출혈성 뇌졸중 사례를 분석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음 외에 GGT를 높일 수 있는 지방간과 B형 간염의 영향은 배제했다. /연합뉴스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위헌 아니다"

일 최고재판소 손배소송 기각

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의 감정이 침해받더라도 즉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는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총 5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번 소송은 2001년 8월13일 참배가 대상.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한 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방문록에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라는 자필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논의
남북체육회담 29일 개성서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23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단일팀 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오는 29일 개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올들어 총 17차례의 남북회담을 개최했고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내달 11~14일 부산에서 열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 "생사확인 및 상봉추진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대내적으로는 '납북피해자 지원특별법'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일반 상업금융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전남 가계 체감경기 악화

한은 2분기 동향조사

광주·전남지역의 2·4분기 가계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관내 356가구를 대상으로 2·4 분기 소비자동향조사지수(CSI)를 분석한 결과 현재생활형편 CSI나 생활형편전망 CSI 모두 전 분기보다 나바졌다.

전분기 현재생활형편 CSI와 생활형편전망 CSI는 각각 91, 103인데 비해 2·4분기는 89, 98로 각각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현재의 실제 생활형편 상황을, 생활형편전망 CSI는 향후 생 활형편에 대한 전망을 각각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할수록 개선되는 것으로, 반대일 경우 악화로 해석된다.

이밖에 향후 1년간 전망 지표도 ▲가계수입 CSI 99→97 ▲소비지출 CSI 114→111 ▲고용사정 CSI 99→90 등으로 대부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전국의 30개 도시 2천469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15일 조사해 23일 발표한 '2·4 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에 따르면 현재경기판단 CSI는 68로 전분기에 비해 무려 19포인트나 급락했다. 또 향후경기전망 CSI 역시 102에서 81로 21포인트 추락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이낙연 민주 원내대표 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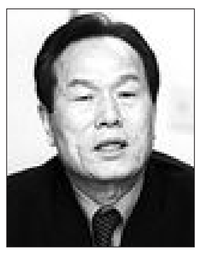
민주당이 오는 29일 당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17대 국회 전반기 원내대표를 맡았던 이낙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의원은 23일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 한화갑 대표에 사퇴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당에 충실하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현재 정책위의장인 김효석 의원(장성·담양·곡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조재환 사무총장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사무총장으로는 박주선 전 의원을 비롯 일부 원외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전남도당위원장 박재순씨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재순 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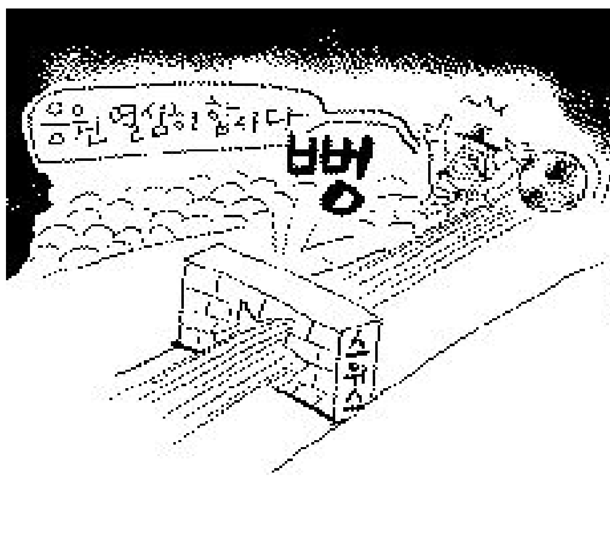
도당은 이날 또 전남지역 대의원 245명(당연직 포함)을 선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11일 서울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책임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도당을 활성화하고 내년 대선에 전남이 정권 창출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日만평

- 김종두



"신문제작·경영, 정부 간섭은 위헌"

신문협, 헌재에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신문 관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신문업계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편집권 독립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시민단체가 자신의 사상에 입각해 신문사의 경향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신문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공개와 관련해서도 "다른 사기업과 달리 신문사의 경영정보를 정부 소속 위원회가 검증, 공개토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고, 검증,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제3자의 시정권고를 인정한 조항과 관련 "언론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후 검열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의 감시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